

민주 안호영 의원, 완주·전주 통합 논란 속 대안 제시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로 갈등 넘어야”

완주·전주에 익산 포함
광역경제권 구상 제안
“도민 공감 등 우선돼야”

완주와 전주의 행정 통합 논란이 지역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전주·완주·익산을 포괄하는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구상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 의원은 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의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통합은 거저 통합”이라며 “행정구역 통합보다 중요한 것은 기능적 협력과 실질적 연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행정 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바꾸는 일이 아니다”며 주민의 삶, 지역의 정체성, 그리고 지방자치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참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 의원이 제안한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는 전주, 완주, 익산을 산업·교통·에너지 측면에서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으로 연결하고, 자치권을 유지한 채 광역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는 모델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주·완주·익산을 포괄하는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구상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활용하면 기존 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메가시티 구성이 가능하다”며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국 3북’ 국정 구상이나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제시한 ‘선 협력, 후 통합’ 방향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수도권 집중에 맞서 비수도권 광역권이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북은 전주·완주·익산이라는 탄탄한 삼각축을 이미 갖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의 “도와 전주시가 추진 중인 통합에 반대

하느냐”고 묻자, 안 의원은 “반대라기보다는 ‘숙의 없는 방식’으로 주민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린 상태에서 주민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대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전북자치도에서 실시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찬성만 유도하는 식의 캠페인은 결국 주민을 소외시키는 것”이라며 “정치는 해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제시하고, 도민이 직접 판단하도록 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과의 협의 가능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서 안 의원은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익산 시민들과는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눈바 있다”며 “질문을 할 때에 익산 시민은 대부분 긍정을 표했으며 익산은 식품 산업, 교통망, 스마트 물류 등에서 전북 발전의 중요한 축이다.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한 “이전의 새만금 메가시티 구상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만 추구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구상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다. 자치권을 보장하면서도 공동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구조이기에 훨씬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도민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광역도시로의 도약과 행정 효율화를 강조하는 반면, 반대 측은 주민 자치권 약화와 지역 불균형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지금처럼 여론을 편향적으로 조성하거나 정치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갈등만 깊어질 것”이라며 “어떤 선택도 도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북이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내부 분열이 아닌 연대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삶을 진정으로 개선하는 길은 강압이 아니라 공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도민의 분열을 초래하는 통합 추진이 아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그 해법 중 하나가 바로 전북형 메가시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의 기자회견이 현재의 행정 통합 논쟁을 넘어서는 새로운 흐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며, 당장 실현은 어렵더라도 메가시티 구상이 도민 공감대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안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에는 완주와 전주 통합을 찬성하는 측에서 다수 참석해 안 의원에게 통합 반대 추진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 즉시 가동... 위원장 임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과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를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당대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조금 전 비공개 최고위(회의)에서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결했다”고 했다. 이어 정 대표는 검찰개혁 특위원장에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 특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 특위원장에 백혜련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 있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진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주권정당 특위원장은 장경태 의원을 임명했다”며 “당원주권정당의 완성, 모든 당은 1인1표제, 전당원 투표 상설화 등 국민과 당원께 약속드린 것들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뉴스시스



김영태 남원시의장
수해피해 현장 방문

남원시의회는 김영태 의장이 4일,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피해 상황과 복구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물놀이 시설 등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남원 지역에는 지난 3일 오후 4시부터 4일 오전 8시까지 누적 총 강수량이 181.6mm에 달했으며, 곳곳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김영태 의장은 “시민의 피서지이자 어린이들의 주요한 놀이 시설인 만큼 시설물을 빠르고 꼼꼼한 복구와 피해 수습과 복구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예타 면제 통한 신속한 새만금 사업 추진

민주 이원택 의원, ‘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새만금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만금사업의 용지매립 및 조성,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을 통해 예타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공청사 및 초·중·고교 시설 신·증축 △국가유신 복원사업 △국가안보 및 보안에 필요한 국방사업 △지역균형발전 등에 따라 국가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 일부에 대해서만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타는 사업의 경제성(B/C), 정책적 타당성(정책 목표 부합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경제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예타 통과가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만호 기자

농업·농민 위한 제도적 안정망 구축 성과

민주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농업민생 4법’ 국회 통과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농업 민생 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며 농업·농민을 위한 제도적 안정망 구축에 성과를 거뒀다. 윤 의원은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3일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어, 이로써 총 4건의 ‘농업 민생 4법’이 모두 입법 절차를 마쳤다. 특히 윤 의원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았다. 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양곡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쌀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거나 초과 생산이 발생할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가 수매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수급 계획을 수립

하고,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가격 안정 제도를 신설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와 거부권 행사로 수차례 좌절됐지만, 농민을 위한 입법이라는 일념으로 끝까지 밀어붙였다”며 “이번 법 통과로 농민들이 쌀값과 농산물 가격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희망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은 국가의 근간이자 미래이며, 오늘 통과된 법안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국가책임 농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의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